

# “삼성, 소환 불응 등 수사 비협조”

## 삼성특검 “증거 훼손 시도도…체포영장 청구 등 조치”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30일 삼성측의 증거 훼손과 소환 불응 등 수사에 지장을 주는 행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공보관인 윤정석 특검보는 “오늘 삼성측 관계자 4명에 대해 소환 조사에 응해달라고 통보했으나 1명만 나오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들은 여러가지 사정을 들어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라고 전했다.

윤 특검보는 “이들은 언론 노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을 받는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특검팀 입장에서는 좀 더 성실한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하

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삼성측의 ‘수사 비협조’를 지적했다.

그는 “소환 조사에 계속 불응하는 사람도 있어 계속 출석을 요구하는 중”이라며 “(현 상황이) 단발적인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거듭 출석을 요구하면서 체포영장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특검팀은 지난주 금요일 삼성화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여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다른 방에서 한 직원이 전

산서버로 접속해 과천 전산센터의 자료를 일부 훼손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객관적으로 전산자료 상에 ‘없을 수 없는 자료’인데도 삼성측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존재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삼성측에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과천 전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6일째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삼성 일가의 미술품 구매를 대행한 것으로 알려진 흥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의 경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며, “에버랜드 경영권 불법 승계” 수사와 관련해 내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매케인, 공화 플로리다 경선 승리

## 美 대선, 롬니 5%차 제치고 선두 자리 굳혀 민주 힐러리는 오바마 꺾어…실리없는 설욕

미국 대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플로리다주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경선)에서 29일(현지시간)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승리, 경선 레이스의 선두 주자로 부상했다.

매케인 의원은 21개주가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다음달 5일 ‘슈퍼 화요일’ 결전을 앞두고 플로리다

주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함으로써 선두 자리를 굳히며 한층 유리한 입지를 선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햄프셔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경선에서 승리한 매케인은 미시간과 네바다 경선 승자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막판까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접전을 펼쳤으나 개표율 97% 현재

36%의 지지율로 롬니(31%)를 제치고 승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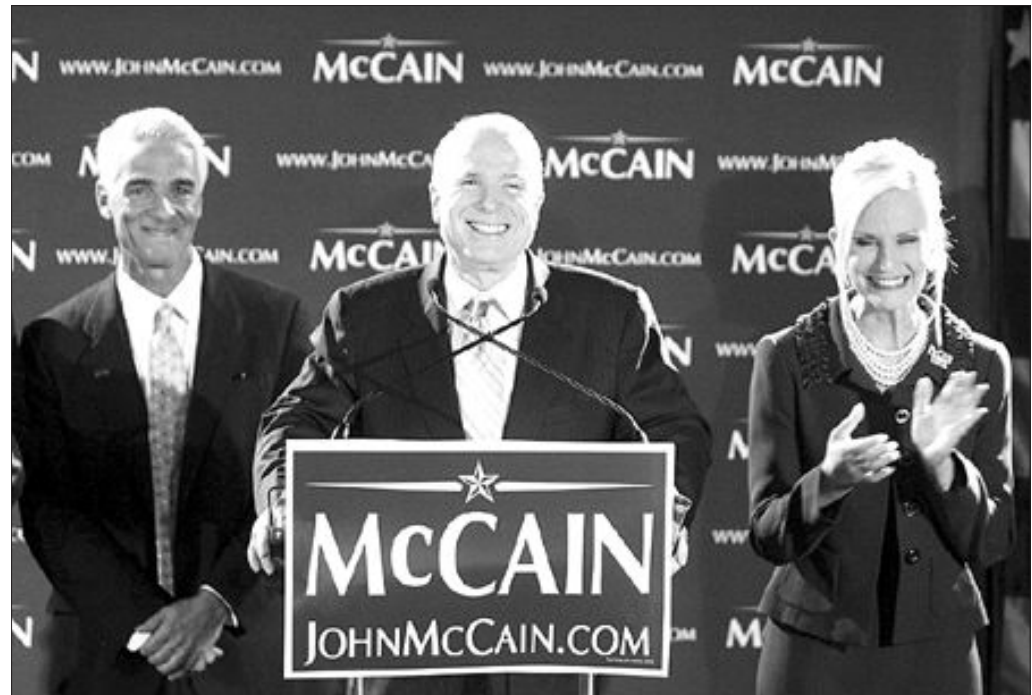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수 주 간 플로리다에 머물며 이 지역을 집중 공략했음에도 불구하고 15%의 저조한 득표율로 3위에 그쳤으며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승리해 바람을 일으킨 마이크 허케비 전 아칸소 주지사도 14% 지지율에 머물러 두 사람 모두 경선을 완주할 수 없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매케인은 승리가 확정된 뒤 “다음주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이겨서 우리 당의 후보가 되고자 한다”며 미국과 공화당을 위대하게 만든 원칙을 지킴으로써 “11월 보다 큰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누구든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개표율 97% 현재 50%의 지지율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33%)을 크게 누르고 승리를 차지했다. 플로리다주 민주당 경선에서는 21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지만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당규를 거두고 경선 날짜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긴 플로리다주의 프라이머리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로 해 실제 효력은 없다.

힐러리는 그러나 ‘슈퍼 화요일’ 일주일 앞두고 열린 플로리다 경선에서 승리한데 큰 의미를 부여하려 애쓰고 있으며 오는 8월 전당대회에 플로리다주 대의원들을 참석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 후보들은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플로리다주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로 서약했으나, 힐러리는 이날 투표가 끝난 뒤 경선 승리 축하 모임에 참석해 오는 8월 후보 지명 전당대회에 플로리다 대의원들을 참석시키는 것은 물론 11월 대선 때 플로리다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존 매케인 애리조나주 지사가 29일 플로리다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후 마이애미에서 부인 신디 여사와 나란히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다스 회계장부 등 자료 확보

## BBK 특검, 이상은씨 곧 방문조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주)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주)다스와 자회사 흥은프렌딩에 대한 실질적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로써 20~21일 두 차례에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법원에서 기각되며 주춤했던 (주)다스 및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특검보고서와 과견 검사, 수사관 등 수십 명을 (주)다스 경주 본사와 서울 지사, (주)다스의 자회사 흥은프렌딩 사무실에 보내 결계

서류와 각종 메모, 회계장부 등을 현장에서 임의제출 받았다.

특검 관계자는 30일 “임의제출을 하려면 그 쪽에서 갖고오고 싶은 것만 갖고 올 수 있어 (다스 측) 변호사와 의논해 사무실 3곳을 사실상 수색해 필요한 자료를 현장에서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확보한 내부 결계 서류와 메모 등을 분석해 이 회사의 경영에 제3자가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 정식 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돈이 어디로 흘러간 정황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작년 8월 ‘도곡동 땅 중 이상

은씨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결과를 내 놓았으며 12월에는 이씨의 도곡동 땅 판매금 17억원이 다스 로 흘러들어간 걸 확인하고도 계좌 추적 기간의 한계 등을 이유로 그 경위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 미시적인 17억원의 돈이 누구의 것이며 어떻게 다스로 흘러들어갔는지를 밝히는 게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 논란을 함께 규명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추가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팀은 경주 동국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상은씨를 곧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대형 첩보위성 북미 추락” 미군 대책 마련 비상

미군에 초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테러나 전쟁 때문이 아니라 내달 말, 또는 3월 초 지구에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첩보위성의 추락지점이 북미지역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군은 즉각 비상계획 마련에 나섰다.

미 본토 방위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의 진 리뉴어트 사령관은 29일(현지시간) “이 첩보위성이 북미지역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위성의 크기를 감안할 때 파편 중 일부가 대기권 진입 때 불타지 않고 지상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관련 기관들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美하원 1,460억달러 경기부양책 통과

## 세금 감면 등 내용…상원 “고소득자도 세금 환급”

미 하원은 29일(현지시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미 행정부와 민주·공화 양당 하원 지도부가 지난 주에 초당적으로 합의한 1천46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경기부양책 관련 법안을 상정, 찬반 투표를 거쳐 이를 채택했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소비자들의 소비촉진을 위해 세금납부 대상자인 3천달러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1천800달러 세금을 환급하고 기업에게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전날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경기부양책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하지만 상원은 하원이 마련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준비중이며 이르면 주말까지 처리

할 예정이어서 상·하원간 의견조율이 주목된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막스 보커스 의원이 마련하고 민주당 및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하는 상원 경기부양책 방안은 노인들과 실업자들에게 수십억달러를 제공하고 세금 환급액을 1인당 500달러(하원 600달러), 부부당 1천달러(하원 1천200달러)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원 부양책은 하원이 세금 환급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고소득자들도 환급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보커스 위원장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이 같은 부양책 관련법안을 급주 말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예초 의회 지도자들은 내달 15일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부시 대통령이 서명, 발효토록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상·하원 경기부양책간 견해차가 커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 “北 핵시설 불능화 완료면 美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 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마친 뒤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나 적성국 교역금지법 해제 중 하나를 추진하고 나머지는 완전·정확한 핵실험을 마친 뒤 실시하는 단계적 해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30일 전망했다.

CRS는 또 미국이 당장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지 않고 이보다 단계가 낮은 ‘불완전테러협조국’이나 ‘테러우려국’으로 지정,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부분삭제한 뒤 북한이 핵실험을 마친 뒤 계속 협상하는 ‘징검다리 해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CRS는 이날 공개한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제하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의견차로 북

핵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을 지적한 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향후 미국 정부가 채택할 3가지 정책대안을 소개했다.

미국과 북한은 앞서 6자회담 ‘2.13 합의’와 ‘10.3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작년 연말까지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적성국 교역금지법 해제를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 2008년 전액 국비 교육생 모집

| 구분 | 학사   | 학사   | 학사   | 학사   | 학사   |
|----|------|------|------|------|------|
| 1  | 1.1  | 1.2  | 1.3  | 1.4  | 1.5  |
| 2  | 2.1  | 2.2  | 2.3  | 2.4  | 2.5  |
| 3  | 3.1  | 3.2  | 3.3  | 3.4  | 3.5  |
| 4  | 4.1  | 4.2  | 4.3  | 4.4  | 4.5  |
| 5  | 5.1  | 5.2  | 5.3  | 5.4  | 5.5  |
| 6  | 6.1  | 6.2  | 6.3  | 6.4  | 6.5  |
| 7  | 7.1  | 7.2  | 7.3  | 7.4  | 7.5  |
| 8  | 8.1  | 8.2  | 8.3  | 8.4  | 8.5  |
| 9  | 9.1  | 9.2  | 9.3  | 9.4  | 9.5  |
| 10 | 10.1 | 10.2 | 10.3 | 10.4 | 10.5 |

061) 525-9933, 526-9875

### 마시는 豚태반

7.13.71

061-528-7788

061-528-7788